

주최

노동당
청소년
위원회



3월 30일 4시
구로
민중의 집



청소년 정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자료 집



자료집 구성

- 2 고등학생 운동의 정치적 한계와 가능성의 경계에서
정용주 / 오늘의 교육 편집위원
- 18 일상에서의 정치주체화, 청소년알바노조
박하루 / 알바노조 청소년분회 조합원
- 22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참여단 2년의 기록
‘기대 받지 않을 권리’
김수경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참여단 1기, 2기 前 위원
- 32 실천 없이 제도 없다
- 청소년의 권리이자 운동으로서의 '정치'라는 녀석
공현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 42 청소년 정치의 가능성
귀모 / 노동당 청소년위원회 회원
- 50 광고



정용주 / 오늘의 교육 편집위원

'고등학생 운동의 정치적 한계와 가능성의 경계에서'

1. 고등학생 운동이라는 학생운동의 성격

나는 한 때 고등학생 운동을 했었다는 후일담을 늘어 놓기 위해 글을 쓰는 것은 아니다. 또한 청소년 운동과 고등학생 운동 간의 연속성과 단절이 존재하므로 어떤 면을 청소년 운동이 고등학생 운동으로부터 이어받고 있고 어떤 점이 단절되어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도 아니다. 그저 대학생 운동, 전교조로 대표되는 교사운동 속에서 하나의 정치운동으로서 고등학생 운동의 위상을 바라보았던 활동가로서 고등학생 운동의 그 정치적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보고자 함이다.

2. 나의 고등학생운동 경험 - 비정상적인 학교 체제에 대한 저항

나는 권위주의 시기인 전두환 정부 시절부터 민주주의 이행기인 김영삼 정부까지 초·중·고등학교를 다녔고, 1985년부터 1994년 시기에 걸쳐 형성되어 발전하고 쇠퇴한 고등학생운동을 경험했다. 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리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라는 문구다. 영화의 제목이 되기도 했던 이 표현은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자살을 하면서 남긴 유서 속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이들의 죽음에 대한 애도와 공감, 그리고 오로지 입시만을 위해 존재하는 학교와 아우슈비츠 관리자 같은 교사에 대한 분노는 우리를 고등학생운동의 주체로 호명했다. 이 시기에 전교조도 결성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시의 고등학생운동을 "선생님을 돌려주세요"나 "선생님! 사랑해요!" 같은 구호로 대변되는 참교육운동의 일환으로 기억하지만, 당시 고등학생운동의 노선은 다양했다. 나는 고등학생운동이 노동자 계급의 해방에 복무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고등학생의 정치 세력화가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있었다. 그래서 고등학생의 정치 활동을 전면화하고, 전국적인 고등학생 전위 조직을 만들기 위한 활동에 앞장섰다. 고등학생 대중지를 창간하고,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청소년 대중정치교실을 개최하고, 지속적인 세미나 활동을 하고, 학내 민주화 투쟁을 해 나갔다. 나와 내 동료들은 압수 수색을 당하거나 구속되어 재판을 받기도 했다. 일부는 군대에서 기무사에 연행되어 구타를 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보다 낫설었던 풍경은 고등학생 운동 내부에서 고등학생 운동을 선생님 사랑해요 운동에서 한 단계 고양시켜 정치적 가능성을 열어가려 했던 고운 세력을 안기부의 프락치로 매도하거나 같은 집회장에서 옆에 서는 것 자체도 거부당했다는 것이다.

학년이 올라가고, 전교조 해직 교사의 복직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고등학생운동 내외적으로도 위기가 닥쳤다. 대학생 선배들이나 운동단체들, 그리고 전교조 교사들은 노동자 지향을 갖는 고등학생운동, 그리고 전교조

와 결이 다른 독자적 교육운동 세력으로서 고등학생운동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고등학생은 당연히 대학에 진학해 (대)학생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전교조 교사들은 제자들을 대학에 진학시켜야 한다는 의식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졸업 후 노동운동으로 진로를 결정한 선배들(우리는 졸업 후 현장으로 자신을 진로를 정한 선배들을 존재이전이라는 용어를 써서 표현했다.)을 빼고는 대부분의 활동가들이 재수생이라는 불안한 신분을 가져야 했고, 대학에 가지 않고 고등학생운동을 측면 지원하는 구조도 매우 취약했다. 고등학생들이 사회적 통념과 대학 진학에 대한 압박을 뚫고 독자적 정치 세력으로 발전하기에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많이 미약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활동가들은 대학 진학을 선택해야 했고, 결국 우리가 비판했던 입시주의에 의해 고등학생운동은 약화되어 갔다.

3. 사회운동으로 취급받지 못한 고등학생운동

잘 알고 있듯이 고등학생운동은 1987년 이후 중·고등학생들의 조직화와 집단행동 과정에서 고등학생들이 스스로의 운동을 지칭한 용어이다. 6월 민주항쟁 이후 사회 전체적으로 민주주의가 확장되면서 집단행동이 폭발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고, 이때 고등학생운동도 출현하였다. 이 시기 고등학생운동은 사립학교를 비롯한 학내 민주화 투쟁, 전교조 교사들의 해직으로 인해 생겨난 참교육운동, 그리고 고등학생운동의 정치 세력화라는 흐름이 복합적으로 표출되었다.

당시 고등학생 운동의 층위가 학내민주화 투쟁, 참교육 운동, 정치 세력화 라는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된 것과 흐름을 같이 하여 고등학생들이 제기했던 의제들도 두발 제한 철폐, 교복 자율화, 강제 야간 자율학습 폐지, 보충수업 폐지, 입시 교육 반대, 사학 비리 척결, 학생회의 자율적 활동 보장, 고등학생 선거권 쟁취와 고등학생 정치 활동 보장 등에 이르기까지 다

양했다. 운동 형태도 유인물 배포, 낙서, 농성, 교내 시위, 가두 투쟁, 학교 간 연합 집회, 야당 당사 농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되었다. 시대가 시대인지라 학교 안에서도 소모임 등을 통한 다양한 공론장이 구성되었다. 특히 1989년 전교조가 결성된 후 고등학생운동은 전교조 활동과 관련을 맺으면서 강력한 상승작용을 일으키기 시작했으며 전국단위의 조직들이 속속 결성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민주주의 이행 과정에서 분출했던 고등학생운동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다소 침체기를 맞이한다. 물론 학교 규율 체계에 대한 저항을 멈추지는 않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형식적 민주주의가 확장되고 '저항의 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의 제도화'가 진전되었고 고등학생운동은 청소년운동이라는 성격으로 전환되고, 이 시기부터 '청소년인권운동'이라는 고유명사로 불리게 된다.

이미 논문을 비롯해 많은 글에서 분석되었듯이, 당시에 고등학생운동은 하나의 사회운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통념이 존재하였다. 고등학생운동을 독립된 운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학생이나 교사, 특정 정파의 의식화 작업의 일환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했다. 게다가 "선생님을 돌려주세요"라는 구호를 외치며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운동만이 순수한 고등학생운동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고등학생 운동을 낭만화하는 이데올로기적인 공세도 있었다. 미성숙한 연령 집단이 전교조 결성으로 해직된 선생님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분노로 일시적으로 한 운동이라는 인식이 컸던 것이 현실이다.

4. 고등학생운동과 청소년인권운동 사이

물론 이런 통념이 당시 고등학생운동이 성숙한 운동으로서 하나의 세력이 되지 못한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 시기 운동을 분석한 여러 글을 보면 고등학생운동이 형성된 시기적 특성들로 민주주의로의 이행, 각종 사회적 요구들의 분출, 억압적 학교제도와 입시 체제에 대한 분노, 전교조 결성을 든다. 여기서 핵심은 이러한 요소들에 대해 저항했던 고등학생 스스로의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의지일 것이다. 나를 포함해 당시 운동을 했던 고등학생들은 그 누구로부터도 구속받지 않고, 부모와 교사, 학업으로부터 해방된 우리들의 공화국을 꿈꾸었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은 지속되지 못했다. 고등학생의 계급적 해방이나 자본주의 철폐를 구호로서만 외쳤을 뿐 기본소득운동, 학교제도를 넘는 다양한 배움공간의 창출 같은 전략으로 구체화하지 못했고, 운동의 전망도 갖지 못했다. 다만 우리는 우리들끼리 들떠서 혁명의 시기가 도래했다느니 하면서 자본주의의 압박한 파국을 이야기했을 뿐이다.

1990년대 이후 학교 밖 청소년들이 증가하면서 ‘학생 = 청소년’이라는 학제를 매개로 한 청소년기의 개념화가 더 이상 당연하고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 고등학생운동은 이후 청소년인권운동이라는 말로 바뀌었다. 이 둘을 지속으로 보건 단절로 보건, 청소년인권운동이 고등학생운동의 문제의식을 확장하는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다. 고등학생운동은 비록 공고, 인문계, 여상 등 다양한 고등학교 학생들을 묶어내 연대적 실천을 조직하긴 했지만 ‘학생 = 청소년’이라는 틀에 갇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고등학생운동이 학교를 중심으로 진행된 싸움이긴 했지만 사립과 공립, 인문계와 실업계를 넘어 인간으로서 삶 자체를 고민하고 만 17세 선거권 쟁취 등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제도화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지만, 교사, 학부모, 그리고 같은 고등학생들에 의해 미숙한 운동으로 취급받고, 대학이 아닌 다른 삶을 상상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고등학생 운동은 자기조직화에 실패하였고 결국

소멸해 갔다. 아니 대학운동으로 흡수되었다.

여기에 더해 고등학생 운동의 활동가들 중에 상당수는 이미 학교라는 공간 속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운동 방식에서도 매우 신사적이며 인정받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들은 매우 모범적이며 공부도 잘하고, 규칙을 지켜 토론하고 반론하는 데 능숙한 예비 정치인이며 지식인이었다. 고등학생 운동의 활동가들은 자치활동이라는 합법적 틀에서 정제된 언어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인권을 이야기했다. 반면에 주체적이지 못하고 의식적인 선택이 아닌 어떤 행동은 여전히 인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며 정당한 저항이 아닌 문제 행동으로 분류되어 처벌의 대상이 됐다. 내가 학교에 다니던 시절, 공부를 매우 잘하는 학생과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동시에 염색을 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공부를 잘한 학생의 염색은 창의적이며 개성적인 표현으로 인정받았지만, 공부를 못하는 학생의 염색은 일탈 행위로 학생부의 지도를 받아야 했다. 같은 사건에 대한 해석의 차이는 저항과 일탈을 구분 짓는 교사들의 정의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갖게 했다.

이 시기 고등학생운동으로 대변되는 시기의 요구들 대부분이 이미 정상적인 국가 체제에서라면 올바른 민주주의적 참여의 형태로 인정될 만한 요구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 다시 말해 고등학생운동 세력의 보수와 진보로의 분화라는 문제가 이미 예견되어 있었던 것이다.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저항 그 자체는 진보와 보수 이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5. 계급으로서 청소년

자본주의 체제에서 청소년들은 하나의 세대가 아니라 계급이다. 그들 대부분은 소득이 없으며, 부모의 소득에 기생하여 용돈으로 살아간다. 따라

서 부모의 소득, 사회적 지위에 의해 청소년은 계급적으로 분할되어 있다. 그런데 청소년을 세대로 접근하면서 집단의 연령적인 특성이 과장된다. 이렇게 되면 일반명사로서 청소년만 보이게 된다. 질풍노도의 시기니 어찌고 하는 식으로 분류되며 이들 모두는 대학을 가야 하는 존재, 대학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로 규정되며 탈학교, 대학거부 선언은 무의미한 것으로 취급한다. 청소년은 철저하게 학교에 갇히게 된다.

그런데 얼마 후에 대학생이 될 청소년들의 미래는 어떤가? 대학생들은 대학 졸업장이 있건 없건 안정된 직장에서 멀리 떨어진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청소년기본소득단체를 통해 소개된 글에서처럼 “직장 얻고, 결혼하고, 집 사고,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사는 새해 덕담 같은 삶을 꿈꿔 보기도 전에 돈의 쓴맛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꿈을 가슴에 간직하고 대학만 졸업하면 입에 풀칠은 할 것이라는 기대는 수십 군데 면접을 보러 다니는 대학생들이 청소년의 미래이며 꿈이라는 현실로 대체되었다. 엄습하는 절망감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라도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제 옆 친구가 성적 때문에 자살을 해도 어떤 시대적 율령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철저하게 부적응한 그리고 나약한 개인의 일이 된다.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꿈이 없다고 비판한다. 공부를 안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계급화되어 있는 청소년들에게 제시된 복지라는 것은 학교를 중심으로 한 복지에서 멈춘다. 학교에 온 청소년에 대한 무상급식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논쟁처럼. 이들의 삶과 관련된 복지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생각해 보자. 지난 대선에서 50, 60대의 표 결집이 강력했다고 한다. 이유는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는 표심이 반영된 결과란다. 분명 이들의 표심은 절망의 표현일 수 있다. 그런데 청소년은 어떤가? 선거권이 없으므로 자신의 미래를 선택할 수 없고, 성인 세대들이 선택한 한국의 미래를 받아

들어야 한다. 모은 재산을 잃을 두려움이 아니라 모은 재산이 없다는 것에서 오는 무기력과 체념이 이들을 강하게 지배한다. 다시 말해 청소년의 경제적 현실은 더욱 계급화되고 있다. 부모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힘이 없어 더욱더 의존적이어야 하지만, 사회가 요구하는 소비의 총량은 급속도로 커져 가고 있다. 철저하게 부모에게 사적으로 의존하여 살아가도록 하면서 꿈을 가지라고 말한다.

세대 프레임을 걷고 보면, 모든 개인은 생존에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삶을 살아야 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자신의 가능성과 적성을 충분히 실험하고, 뚜렷한 목표를 위해 오랫동안 준비하는 삶을 살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부모가 아니라 공동체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것의 가장 기초적인 형태가 청소년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청소년에게 무슨 스마트폰이 필요하냐?’, ‘요즘 청소년들은 너무 소비적이다’라는 식의 접근을 하는 것에서 상상력을 멈춘다. 나 역시 모든 것을 관리의 대상으로 볼 뿐이다. 스마트폰 때문에 수업을 할 수 없다느니 하는 이야기만 하면서.

그런데 상상력을 확장해 보자. 청소년들이 부모와 상관없이, 학교에 다니는 것과 상관없이 자신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대안교육 및 공공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학습 안식년제를 보장하며, 다양한 강의 자료 공개를 의무화하면서 도서관, 강의실 등의 시설을 청소년에게 개방하면 어떤가? 학교 전체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고, 청소년의 통신비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과 같은 고민들이 진행되면서 정보통신 기기의 올바른 사용을 교육하는 것은 어떤가? 학교가 아닌 다른 배움의 형식을 다양하게 고민하고, 학교에 다니는 것과 무관하게 모든 배움을 보편적 복지의 정신에 따라 구현하는 것은 어떤가? 왜 나를 포함해 우리의 상상력은 더 확장되지 못하는가?

6. 고등학생 운동의 정치적 한계

학교교육은 가족이 구성한 개인의 일차적 동일성을 해체하면서 민족적, 국가적 동일성을 재구성하는 근대적 기획이다. 이 과정에서 상징적 폭력성이 개입하는데 이는 개인이 민족과 같은 특정한 가상적 동일성 내에서 서로를 인지하도록 만드는 폭력이다. 이러한 전제아래 지식과 무지의 차이를 확립하고 양자 사이의 지배 복종 관계를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권력 관계를 지식화한다. 따라서 학교는 단순히 배움의 공간이 아니라 사물에 대한 통제 관계, 타자들에 대한 행위관계, 자기 자신에 대한 관계를 체계화하는데 이것을 지식, 권력, 윤리의 문제로 대응시킬 수 있다. 즉 지식, 권력, 윤리는 우리를 주체화하는 세 가지 축이며, 우리는 복종시키는 축이기도 하다.

대중교육은 시민혁명 이후 노동자계급이 보편적 인권으로 주장해온 지식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대중교육은 노동자계급에게 지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지배계급이 독점해온 중등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해방과 평등의 기획을 만들어 갔다.

그런데 이러한 해방의 기획은 동시에 대중과 엘리트 분할, 대중내부 육체 노동자, 지식노동자를 분할하는 치안의 기획과 충돌하게 된다. 후자는 이러한 근대는 가족을 통해 성적 차이를 재생산하고, 학교를 통해 지적 차이 재생산하며 대중을 분할한다고 보았다. 즉 능동적 존재로서 엘리트, 수동적 존재로서 대중을 분할하는 지적 차이는 계급 착취와 결합한다. 그래서 학교는 위계화된 분업으로 구획된 사회, 노동이 상품이 되고 능력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유지 존속 재생산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학교는 지적 차이에 기초한 지배-생산적 활동과, 비생산적 활동의 분할, 육체노동과 지식노동의 분할에 기초한 지배-를 재생하며 지식과 교육에 대한 대중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포섭하는 동시에 신분과 계급에 따른 교육

독점을 해소하는 대중교육제도를 확립한다. 문제는 평등의 기획으로서 대중교육이 모든 대중에게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성과주의를 통해 대중 내부의 분할을 정당화한다는 사실이다.

지적차이의 제도적 형태로서 학교교육은 개인에게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평등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었으며 지식은 개인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조건으로 인식되었다. 그런데 학교교육을 통해 불평등은 개선되지 않았으며 개인은 자유를 상실한 존재로 있게 되었다. 또한 지적차이를 제거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지적 차이는 지식과 무지의 경계를 규정하고 엘리트와 대중을 분할하는 원리가 되었으며, 지배와 예속의 관계는 학교교육을 통해 지적 위계라는 형태를 띠게 되었다. 그래서 학교는 정치적이 제도이며 학교교육은 사물에 대한 통제, 타자들의 행위에 대한 통제, 자기에 대한 통제를 구체화하는 공간이다.

고등학생 운동은 학교가 학생을 타자화시키며 대상화시키는 문제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정상화를 통해 이러한 학생을 타자화시키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렇게 되면 학교가 학생을 타자화하고, 지배종속을 했던 사건들을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가 포괄하지 못한 존재들, 잉여들이 아니라, 학교라는 틀, 근대적 능력주의를 생산하고 제도화하는 틀이 배제한 자들이고, 학교는 모든 교육을 독점하는 공간이 된다. 즉 내부가 자신을 인지하기 위해 배제시킨 타자의 공간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7. 청소년인권운동의 정치성 문제

한국의 개인들은 자기 자신을 권리를 가진 주체로 보도록 장려받지 못했다. 대신에 개인은 충성스러운 국민으로 만드는 훈육을 통해 유용하고 순종적인 주체로 학교를 통해 자신을 구성해 갔다. 특히 개인을 순종적인 주

체로 구성하는 방식이 탁월함에 따른 학생의 배치였다. 탁월함을 고대 그리스에선 '아르테'라고 말한다. 탁월함을 가진 주체는 자유롭고 정치적이었다. 만약에 이 사회가 탁월함의 순서대로 인간들을 배치하는 곳이라면 그 탁월한 노동력을 얻기 위한 끊임없는 경쟁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국가는 그러한 신호기제를 계속해서 작동시키기만 하면 자발적으로 개인들이 경쟁체제를 구축한다. 이러한 경쟁체제는 위계화 된 사회 공간을 만들고 탁월함에 따라 개인이 배치되고, 학생들도 배치되며, 탁월함에 따라 발언권, 참정권, 시민권을 부여받는다. 이러한 생각이 사회 전체적으로 확장되면 결국은 계급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물론 형식적 차원에서 참여는 확장되었고 이러한 참여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벽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내가 자격이 있는 자인가 하는 자기검열이 강하게 작동하게 된다.

고대 그리스의 모든 도시국가에는 부자와 빈자가 있었고, 수단을 가진 소수와 수단을 갖지 못한 다수가 존재한다는 바로 그 사실에서 정치적 문제가 발생했다. 그런데 이 두 집단은 다수의 빈자들의 자유(eleutheria), 소수의 부자들의 탁월함(arete)이라는 각각 스스로를 식별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었다. 이 두 가지 환원 불가능한 구성요소는 정치적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부의 분배와 권력의 분배가 그것이다. 이 두 가지 문제는 부자들과 빈자들의 갈등을 진정시키고, 사회의 중심에 서려는 빈자들의 열정을 진정시킨다. 이런 맥락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적 목적은 사회적 다수이자 하층민인 오클로스를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것이었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운동은 연속적 인민인 오클로스로부터 스스로를 분할해내는 데모스를 정치철학의 중심에 가져다 놓는 것이다. 즉 자신을 그 자체로서 선언하고 동시에 우열과 정체성을 분배하는 집단의 일자에 합일되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것은 불화를 통한 주체화 과정이다. 자신을 특정한 사회의 부분이나 계급으로 정립하는 것인 동시에 사회의 주어진 부분이나 계급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사회적 실천은 사회질서 속에서 각자에게 분배된 자리와 기능으로부터 벗어나는 탈 정체화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청소년인권운동에서 실천하는 대학거부, 기본소득과 같은 것들은 그런점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질서정연하게 꾸려나가는 기술로서 정치가 아니라 공동체의 다양한 부분들이 자신의 목소리와 몫을 정당하게 주장하는 투쟁으로서 정치투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청소년 운동을 통해 발현되는 정치는 이익집단들 사이의 합리적 논쟁이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가 남의 그것과 더불어 동시에 들려지고, 자신이 정당하고도 충분한 정치적 상대자로서 인정받기 위한 투쟁이다. 그러므로 지배적 언어를 해체하는 이름, 탈분류화, 탈계급화를 주체화하는 이름이 정치적 주체화 과정이 청소년 운동이 실천하고 있는 정치운동이며 앞으로 가야할 방향이라고 본다.

교사로서 학교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지만 학교는 근본적으로 행정을 정치화(관료정치), 배움을 교육화, 경제를 자본화 하는 공간이다. 그러므로 학교는 국가, 시장, 입시에 포섭되며 이렇게 포획된 학교는 제일 먼저 시장에서 율의 관계에 있는 노동을 제거한다. 그리고 시장에서 교환비율을 높이는 진로가 입시와 연결되어 학벌의 카르텔을 낳는다. 마지막으로 자격없는 자들은 침묵해야 한다는 문화의 재생산을 통해 스스로를 정치사회적 공간에서 퇴출시키고 먹고사는 문제에 얽매어 살아가도록 한다. 데모스에서 오이코스로의 퇴행 그리고 투표하는 시민으로의 정체성 형성이 그것이다.

우리는 흔히 청소년은 국가의 미래라는 말을 격언처럼 사용한다. 이 말은 청소년이 어떻게 성장하는가에 따라 국가의 성장 결과도 달라진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 한국의 미래가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는 한국의 미래를 담보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청소년은 국가의 미래라는 담론이 형성되면, 다음으로 국가는 성장의 정도를 보여 주는 각종 지표들을 설정하고 이 지표를 대리 변수로 하여 청소년을 설명하려 한다. 대표적인 것이 학업성취도이며, 최근에는 이에 더해 종합적 역량을 평가하는 사회적 역량, 문해 능력, 학습 역량, 의사소통 역량을 국제적으로 비교한다. 여기에 더해 국가수준의 교육과정과 진보적 교육담론에서 공통적으로 협력이라는 개념이 도배되고 있다. 진화생물학에서도 협력이 이야기되고 있고, 다양한 교육학 담론에서 협력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것은 또 다른 맥락에서 통치성 담론이다. 청소년을 자본과 같은 생산수단으로 접근하는 구조에 저항하지 못하면 복지국가 건설을 탈자본주의 변혁과의 관계 속에서 고민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나는 청소년인권운동이 청소년이 국가의 미래라는 이러한 담론을 해체하고, 궁극적으로 서열화된 학교 체제를 해체하는 방향의 정치성을 가졌으면 한다. 새로운 배움의 방식을 조직화하는 실험들도 다양하게 시도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들이 보편적 복지의 관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청소년이 만약 질풍노도의 시기이고, 무엇이 되고자 하는지 탐색하는 기간이라면 국가는 철저하게 이러한 탐색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다시 말해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의존의 존엄성'을 인정받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국가의 역할은 생명 그 자체로 존중받는다라는 의미에서 인권의 보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어야 한다. 청소년인권운동이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청소년 범주가 아닌 청소년 각자의 삶에 관심을 가지면서, 시민의 영역에 없는, 학생의 영역을 거부하는 자들의 인권 문제가 고민되길 바란다. 탈학교 청소년, 가출 청소년, 다문화 청소년, 성적 소수자들 등의 인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인권은 시민 이전의 인간의 존엄이기 때문이다.

내 경험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고등학생운동, 또는 청소년운동은 시대와 불화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1960년대 유럽의 청소년운동도 결정적으로 베트남 전쟁, 제3세계 해방운동, 우익화되려는 정치적 움직임, 군사력 확장, 미흡한 대학교육의 환경에 대한 공개적 의사 표시였고 이를 막고자 하는 경찰, 정부와 극렬한 대치를 겪었다. 그러나 이러한 청소년운동은 이후 권위적인 유럽 사회의 변혁을 가져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한국 사회에서도 박정희의 권위주의적 독재 체제는 지금까지도 이데올로기적으로나 사회심리적으로 한국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우리가 이명박 정부를 지나면서 확인한 것은 민주주의는 하나의 완성태로 있지 않으며, 늘 불안 속에서 작동한다는 것이다. 이를 지우려는 반권위주의운동은 청소년운동의 열광적 진동을 통해 가능하다.

오늘날 거의 20년 동안 이어지는 아동기와 청소년기는 노동에 대한 새로운 강조라는 현상과 연결된다. 다시 말해 보통교육과 아동노동에 대한 찬성은 어린이를 노동 세계에 진입하도록 준비시키자는 논리 속에서 교육이 점차 이러한 과제에 맞도록 바뀌는 것이었다. 특히나 좋은 정규직을 잡기 위한 생존경쟁에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 전 과정이 포섭되면서 청소년들이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반응하는 능력은 현저하게 약화되었다. 그들은 부모로부터 정규직 노동에 대한 옹호, 그리고 빈민들에 대한 혐오의 감정을 교육받는다. 그리고 비생산적인 삶을 인성의 결함과 동일시하는데, 학교에서 시간의 분할은 철저하게 노동생산성의 원리에 따라 작동한다. 베버가 말한 것처럼 학생들은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는 인간driven man으로 성장한다. 진보를 내세우면서도 공적 영역에서 의존은 수치스러운 것으로 생각하며 그런 인간이 되지 않기 위해 공부하도록 한다. 현대의 복지국가 주장자들도 새로운 복지국가는 의존이 아니라 노동을 장려해야 한다고 선언하며 엄격한 기준을 갖춘 동정심을 촉구한다. 공동체를

통한 돌봄, 사랑과 우정, 의존은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강요당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존의 수치는 학교에서 자기 존중이라는 이름으로 철저하게 교육 받는다.

청소년은 본질적으로 인간이다. 그리고 인간은 창조를 추구하는 정신에 따라 살아가는 삶에서 근원적인 행복을 느낀다. 일찍이 이러한 삶의 방식을 찾은 이들은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삶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외부의 권력에 아랑곳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공포의 지배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대중에게 용기를 갖고 불운에 의연해지라고 설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선 공포의 원인을 없애야 하고, 선한 이의 삶이 더 이상 세속적인 의미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삶에 관여하는 정도를 가능한 한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사회의 정치 및 경제 조직을 혁신해야 한다. 다시 말해, 외부의 권력에 아랑곳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 즉 우리 모두가 게으름뱅이가 될 수 있는 구조로 우리 사회를 바꿀 수만 있다면, 비로소 우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아 나갈 수 있다는 전망인 것이다.

작금의 시대는 성장이 불가능한 사회, 성장이 아니라 생존해야 하는 사회. 잉여와 미숙아로 남는 사회. 경험이 없고 체험만 소비되고 있는 사회이다. 따라서 청소년운동의 실천은 근대적 기획으로서 학교교육의 한계적 태도와 관련되며, 한계를 넘어서서 위반(transgression)을 감행하려는 태도로 이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 청소년 운동은 학교교육을 통한 지식, 선별, 조직화, 통제, 재배치, 해석을 독점하는 공간에 대한 불가능성을 선포하는 것, 학생들이 자기해방을 선언하는 것이어야 한다.

고등학생 운동이 학교교육이라는 장 속에서 교사다움과 학생다움의 관계를 형성하고자 했다면 청소년 운동은 모든 관계의 전복을 실천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본래 스승과 학생간의 대등함, 남녀간의 완전한 대등성, 청년들은 장년층과 대등하고 노예들은 주인들과 대등하며 학생들은 스승들처럼, 동물들은 주인들처럼 대우받는 것이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민주주의는 아르케를 갖지 않는다는 문장으로 정리가 가능하다. 즉 민주주의는 아르케의 논리와 단절, 아르케의 자질로 지배를 예견하는 것과 단절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지배할 능력과 지배 받을 능력의 상관관계와 단절되며 학교교육을 통한 스승과 학생간의 관계설정도 거부된다. 결국 능력에 따른 선별, 분류, 배치라는 학교교육은 예외상태민주주의와 만나 예외상태가 된다. 유능한 대표를 뽑는 선거는 통치할 자격의 부재로서 민주주의로 대체되며, 어떤 역할을 배정하는 원리도 작용하지 못하는 장소로 전환된다. 지배할 자격이 없는 그러므로 지배하지 않는 자의 지배가 구현된다. 나이, 출생, 부, 덕, 지식 같은 통치할 자격을 가진 자라는 아르케의 원리가 부정되는 공간으로 학교는 새로운 장소성과 공간성을 획득하게 된다. 학생과 교사의 관계, 능력에 따른 배치, 교장과 교감, 부장교사와 교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에 따른 배치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재검토는 '평등한 자들의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고등학생 운동이 교육을 고용과 노동, 위계화된 분업 사회에서 지식을 위계화하는 것으로 접근했다면 청소년 운동은 봉기, 혁명의 가능성을 여는 것이어야 한다. 이는 분업 없는 사회, 노동이 상품이 되지 않는 사회에 대한 상상력을 현 제도에 대한 위반된 실천으로 구체화하는 것이다.



박하루 / 일바노조 청소년분회 조합원

일상에서의 정치주체화, 청소년알바노조

지난 3월 6일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서 조사한 '실택 밀바닥 노동 실태조사 보고'에 따르면 '적은' 수의 청소년만이 노동을 하고 있다는 인식에 비해 청소년 노동의 경험률은 예상외로 높았다. 위 실태조사 보고에 따르면 2011년 청소년의 노동 경험률이 재학생은 27.4% 학교밖 청소년은 무려 62.4%나 되었다. 청소년의 노동은 전단지 돌리기부터 편의점, 패스트푸드, 음식점, 주유소 등에서 서빙이나 카운트와 같은 서비스업의 업무를 주로 담당해왔으나 경제위기, 노동빈곤의 심화, 등록금 인상, 고용 불안 등으로 인해 과거 청소년이 일하던 일자리를 20대 청년이나 장년들

로 채워지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청소년 노동은 위험한 배달 대행이나 택배물품 분류 노동, 초단기 근무 형태의 호텔알바, 야간노동, 허드렛일과 같은 더욱 열악한 사각지대로 밀려나고 있는 결과를 초래했다. 청소년 노동에 대한 인식도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다. 노동하는 청소년은 흔히 탈가정한 '노는' 청소년으로 분류되어 학교 안에서, 가정 안에서 문제아로 낙인 찍히고 이를 '비정상'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청소년의 노동은 탈가정한 '노는' 친구들의 한정된 소수의 이야기로 비치고 비정상적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는 더욱 비가시화, 투명인간화 된다. 청소년 노동자들 대부분 본인이 일하는 것을 숨겨야만 한다. 부모나 선생님이 알게 되면 더 이상 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15세 이상은 모두 일할 수 있다고 하지만 18세 미만은 친권자동의서가 필요하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아도 친권자동의서는 어떻게든 받아오라고 한다. 사실 친권동의서를 쓰라고 해도 실제 부모님이나 후견인에게 동의서를 받아오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허위로 서명을 하거나 비청소년 지인에게 부탁하기도 한다. (이런 유명무실함은 둘째 치고 왜 청소년의 노동은 비청소년에게 허락 받아야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나보다 나이가 적으면 일단 반말부터 시작하며 함부로 대하는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나이주의 때문에 청소년알바노동자는 나이를 속이기도 한다. 그들을 사업장 내에서 일하는 '노동자'로서 동등하게 대하지 않는 것이다. 알바노조에서 상담이 들어오는 청소년노동자들의 사례를 들어보면 사업장 안에서의 나이권력 문제는 매우 크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막내'라고 부르면서 대타를 구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된다던지 정해진 일보다 더 많은 잡일을 시킨다던지 심지어는 욕이나 인신공격을 하면서 모욕적인 언사와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많다. '용돈벌이'라는 말은 어른들이 정말 싫어하는 말인데 '신성한' 노동의 대가를 감히 '청소년'들이 머리염색이나

영화 따위를 보는데 쓴다고 하면 월급을 적게 주거나 심지어 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청소년'이 '용돈벌이'로서 돈을 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용납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왜 청소년의 노동은 몰래 해야 하고 들키면 안 되는 일인걸까? 이렇게 노동의 가치는 멋대로 부정당하고 노동하는 내내 천대받으며 그마저도 숨겨야 하는 청소년노동자, 이것이 그들의 현실이다.

한국 사회 내 대다수의 청소년이 자신의 거의 모든 시간을 할애하는 공간은 '학교'내에서 '노동'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다. 각종 설문조사에 따르면 노동을 '막노동'으로 생각하거나 못 배운 자들이 하는 것,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인식은 학교 내에서 노동인권교육의 부재로 인한 것이다. 학교 내에서 노동법에 대한 간단한 지식조차 가르쳐주지 않으니 처음 노동을 시작하는 청소년들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업장 내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만다. 각 상업고등학교 내 취업알선기구는 존재하지만 청소년의 노동 환경을 상담할 상담센터는 존재하지 않는다. 학생을 기업에 보내고 일을 시키면 가산점을 받도록 하여 노동을 필연적으로 하게 하는 현장학습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는 일체 알려주지 않는다. 고교실습생이 산재를 당하거나 사망에 이르는데도 학교는 관심이 없는 것이다.

앞으로 10대들의 70%이상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가난하며 불쌍한 노동자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노동인권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청소년알바노동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있기 때문에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 (물론 전자의 이유를 아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각 중고등학교는 노동관련 기본 교과목을 개설하거나 이에 대한 책(요새는 쉽게 풀이된 책들이 많다!)과 노동법 교육을 실시하고 함께 공부할 수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학교 내 노동 상담 센터를 비치한다면 더욱더 좋겠다.

열악한 청소년알바노동자들의 현실을 어떻게 뜯어고쳐야 하는가에 대해 쉽사리 답을 내놓기 어렵다. 당장 전국적으로 제도를 만들어 놓는다 해서 현실이 쉽게 고쳐지지는 않을 것이다. 악조건에 놓인 청소년의 노동을 바꾸기 위한 정부의 수많은 정책과 대책들은 대부분 일회성에 그치거나 부실 운영되었다. 오히려 '보호'라는 이름에 '규제'를 덧붙여 수많은 청소년노동자들이 일자리를 구하기조차 어려운 더욱더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만들었다.

청소년알바노조는 열악한 청소년알바노동자들의 현실을 노동조합으로서 바꿔내고자 한다. 청소년알바노동자들에게 해당되는 불안정한 노동은 그들의 노동을 더욱 불안정하게 한다.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열악한 현실의 청소년알바노동자들을 모아내는 데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 알바노동자 당사자가 느끼기에 알바의 부당함과 어려운 점을 듣고 의견을 이야기하는 모임의 자리를 정기적으로 만들 예정이다. 청소년알바노동자들을 위해 우리는 노조의 이름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노동현장(학교, 사업장 등)에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말하고자 모였다. 우리는 정치로서도 시민으로서도 노동에서도 배제되어 있는 이 피지배계급의 주체들을 조직으로 선동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꼭 노동현장일 필요는 없다. 학교에서 학교인권을 말하는 것,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공부를 직접 공부하는 것, 사회의 부정당한 민주주의에 문제제기 하는 것, 소수자의 인권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 사실상 우리가 접해있는 모든 과제(혹은 의제)의 방향과 로드맵을 제안하고 만남으로서 진정 청소년이 참여하는 정치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김수경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참여단 1기, 2기 前 위원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참여단 2년의 기록 '기대 받지 않을 권리'

1기 학생참여단

2012년 1월, 우여곡절 끝에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었다. 그 해 5월,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37조에 근거하여 교육감의 자문기구인 '학생참여단'을 설치하였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 37조 (학생참여단)

-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친화적 교육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학생참여단(이하 "참여단"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참여단은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③ 참여단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모집한 학생들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선발한다. 다만, 참여단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소수자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20명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절차를 밟아 교육감이 위촉할 수 있다.
- ④ 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2.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의 개정에 관한 의견 제시
 3. 학생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의견 제시
 4. 학생인권실천계획에 관한 의견 제시
 5.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 및 그 권고에 대한 의견 제시
 6.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 자치행사 주관
 7. 학교규칙을 포함한 제반 학교규율에 대한 의견 제시
 8. 그 밖의 학생인권 증진 및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⑤ 교육감은 지역교육청별로 참여단을 둘 수 있다.

2012년 5월 14일부터 약 7일간의 접수기간을 통해 모집된 100명의 학생참여단은 추첨 등의 방법으로 80여명, 소수자 등 20여명의 교육감 위촉으로 구성되었다. 내가 재학 중인 학교에도 학생인권조례 바람이 불었다. 학생인권조례와 관련된 사진들을 돌려보기 시작했고, 학생참여단 모

집 공고에 한 반에서 십여 명이 지원하기도 하였다. 나 역시도 학생인권조례의 시행으로 조금은 더 존중받고 자유로운 학교생활을 꿈꾸며 지원했었고, 언론 등에서는 서울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처음으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기구였던 참여단에 대하여 비중 있게 보도하였다. 모집기간이 끝나고 열린 발단식에는 교육감과 교육위원회 의원, 시민단체 활동가 등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였다. 그 당시의 기억을 떠올려보건대 아마도, 각자의 기대와 바람을 갖고서 참석한 것이 아니었을까 싶다.

그렇게 시작한 1기 참여단은 대표 선출 과정 등에서 급별 대표 선출 등 나름의 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자발적인 노력 등이 있었다. 6월 이후에는 학생인권조례 시행을 홍보하고 기념하기 위한 학생인권의 날 제정을 위하여 추진단을 꾸리기도 하였고, 자매기구¹인 '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인권의 날 제정을 위한 협의를 갖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의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권고에 대해서도 의견표명을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려 하였다. 그러나 그 해 가을, 광노현 교육감이 직을 상실하면서 학생인권조례와 관련된 모든 업무수행에 제동이 걸렸다.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은 이대영 부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과부 시행령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조례시행을 전면 유보하였다. 때문인지 학생참여단과 학생인권위원회의 행정업무지원을 맡은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협조에 난색을 표하기 시작했고, 많은 수의 학생참여단이 모임에 나오지 않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생겨나곤 했다. 학생참여단 1기가 제안했었던 학생인권의 날 제정, 학생인권실태조사 실시, 지역순회 토론회 개최 등은 검토여부조차 듣지 못하기에 이르렀다.

위와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생인권조례에 애착을 가진 참여단원 십여 명이 모여 구성한 '집행부²'는 학생참여단이 초기에 의결하여 추진하

1 서울특별시조례 제 5247호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참여과 학생인권교육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학생참여단 1기는 1차 정기총회 당시 실무 추진을 위한 집행부를 구성하였고, 이후 자발적 참

려 하였던 '학생인권실태조사', '학생인권조례 시행 홍보' 등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기도 하였다. 학생참여단이 자체적으로 진행했던 실태조사³에는 약 500여명의 서울학생이 참여하였고, '종교의 자유, 차별, 복장 등 신체의 자유' 등에 관련된 구체적 증언들을 확보하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 김형태, 윤명화 의원과의 협조를 통해 '2012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심각한 인권침해 현황들을 알려내는 등의 성과를 이뤄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때부터 학생참여단은 일부 보수진영의 공격을 받기 시작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실태조사 홍보물에 교육청 로고가 들어갔고, 교육청이 승인한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학생인권조례 홈페이지'에 조차 공지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당시 교육청 출입기자로 있었던 조선일보 심 모 기자는 '곽노현은 물러났지만, 물러나지 않는 학생참여단'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법정기구인 학생참여단의 입지를 흔들려 하였다. 기사의 주된 내용은 곽노현 교육감이 물러났지만, 학생참여단은 남아있으면서 교육청의 허락도 없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는 것이었다. 참여단이 교육청 정책에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은 조례에 근거한 업무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교육청(어른)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는 식의 기사였다. 학생들이 무엇인가 일을 벌여서 불쾌했다는 의미가 내포되었던 상당히 정치적인 공격임에 틀림없었다. 학생참여단을 '히틀러 유겐트'에 비유할 정도였으니 말이다. 이 보도 이후로 몇몇 학생인권조례 폐지론자들은 서울교육청에 '학생참여단'에 대한 분노를 표했고, 이후로는 참여단 업무에 대한 교육청의 협조를 얻는 일이 더욱 어려워져 때때로는 회의장소 등의 문제로 한 학생인권위원을 통해 행정업무지원을 받았던 서로에게 미안한 이야기도 생기곤 하였다. 12월 보궐선거에서 문용린 교육감이 당

역자들로 구성원을 확대하여 운영하였다.

3 2012년 서울학생인권 실태조사를 통해 약 6건의 심각한 사안에 대하여 15개 이상의 언론 보도가 이루어지고, 해당 학교들에 긴급점검 등이 이루어진 바 있음.

선된 지 한 달 만에 학생참여단, 학생인권위원회가 공동개최 하였던 '서울 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시행 1주년 기념식'은 기념식 개최 5일 전까지 기념식 장소 제공 여부를 두고 씨름을 했었던 기억이 남는다.

이후 별다른 사건 없이 학생참여단 1기 활동을 마쳤다. 그 해 5월 학생참여단 2기 모집에 지원하여 다시금 위촉되는 행운(불행)을 통해 다시 1년간의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다.

2기 학생참여단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교육청이 학생참여단을 별 생각 없이 놔뒀다가 곤란한 일을 많이 당해 운영에 개입할 분위기”라는 소식통의 전언이었다. 실제로 학생참여단 제 2기 학생참여단 발단식에는 문용린 교육감을 포함한 많은 관료들이 참석하였고, 그 이후로도 교육청은 학생참여단에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문용린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위한 준비들을 진행시키던 와중이었기 때문인지, 참여단의 첫 회의에서부터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교육청은 학생참여단을 ‘주시’ 할 뿐, 학생인권증진을 위한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학생참여단의 의견을 수렴하는 행위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이다. 학생참여단이 학생인권에 대한 교육감과의 대화를 위해 마련했던 ‘교육감과의 대화’에서는 학생인권에 대한 말이 대화 도중 몇 마디 나오는 것에 그쳤고, 교육감의 일방적 설교 분위기에 가깝게 느껴지기도 하였다. 결국 사단이 벌어졌다. 학생참여단이 어떤 기구인지 아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로 알고 있다는 교육감의 답변. 그 자리에 참석했던 많은 학생참여단이 불쾌해했다. 그럼에도 언론에서는 ‘교육감과 학생들이 소통의 장을 가졌다’는 식의 미화된 기사들

만 쏟아냈을 뿐이다. 교육감은 상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소통을 했던 셈이다. 아마도 교육감 비서실에서는 학생들과 화기애애한 교육감의 그림을 기대했을 것이다. 100명의 학생참여단을 도구로 삼아서.

토크쇼가 끝나고 약 한 달 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발표했다. 학생참여단은 그 사실에 대한 공식적인 통보를 전혀 받지 못하였다. 학생인권위원회 마저도 그날 아침에서야 공식적인 통보를 받았던 것이다. 물론, 한 외부 관계자를 통해 7일 전쯤 개정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듣긴 하였지만, 교육청의 공식적인 통보와는 성격이 다른 것이다. 여러 사람들의 마음속에 해도 해도 너무하는 서울교육청이라는 생각들이 팽배했다.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알리는 브리핑 당시 한 기자는 “학생참여단의 의견 수렴이 있었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담당 장학관이 답하였다. “지난 달 가졌던 교육감과의 토크쇼 자리에서 안전도 아니었지만, 안전보다 풍부하게 수렴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서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학생참여단을 방패로 삼던 순간이었다. 나는 이후 개최된 ‘학생인권조례 개정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하여 위와같은 사실들을 폭로하고, 참여단에서 수렴한 학생인권조례 개정반대사유를 낭독하였고,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연단에서 퇴장하는 것을 택하였다. 평생 들을 욕을 다 들었다. 듣도 보도 못한 저급한 욕들이 난무하였었다. 그것은 용기였을까, 분노였을까. 어찌되었건 나의 행동이 여러 곳에 알려지며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대한 반대여론을 확산시키는데 일조했다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컸다. 그 날 저녁 내내 몸이 아프더니 일주일을 넘게 앓았나보다. 잦은 구토로 끼니조차 챙기지 못하였고, 결국 병원행을 택하였다. 개인에게 가해지는 집단폭력의 첫 경험이었다.

다행스럽게도, 토론회 이후로 학생참여단에도 개정반대 여론이 결집했

다. 학생인권조례 개정 상황과 관련된 입장을 표명하기 위하여 공식 회의를 개최했고, 참석자 전원의 의결을 통하여 교육감에 ‘학생인권조례 개정 반대 의견서’를 전달하였다. 그 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하려 하였는데, “보도자료 배포는 알아서들 하시라, 출입기자명단이나 배포에는 협조할 수 없다”는 담당 사무관의 답변이 돌아왔을 뿐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서 출입기자명단을 구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교육청에 비난이 쇄도하였다.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전에 먼저 알리지 않았다, 보도자료 서식에 교육청 로고가 들어갔다는 등의 이유로 또 다시 학생참여단을 탓하였다. 우리가 사용했던 서식은 학생인권위원회의 한 위원이 교육청 주무관과 협의하여 만들었던 서식이었는데 말이다.(ㅋㅋㅋ)유블리에 따라 말이 바뀌는 것이 교육기관이 가져야할 모습일까? 우여곡절을 거치고 개정과 관련된 분위기가 가라앉았고, 학생참여단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시행 2주년 기념식’을 학생인권위, 서울특별시의회와 공동으로 개최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임기를 마치게 되었다.

학생참여단 활동의 한계? 돌아보면?

2년이라는 시간동안 깊은 애정을 갖고 몸 담았던 곳의 한계를 생각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뼈아픈 일일 것이다. 그리고 학생참여단은 관에서 설치된 어떠한 학생기구보다 자발적이고 역동성 있었다고 생각한다. 나름 성깔도 있었고 말이다. 물론, 부족한 점이나 한계가 없지는 않았다. 없었다면 거짓일 것이다.

관내 조직으로서의 독립성 확보의 문제

각 행정기관에는 ‘청소년 참여위원회’, ‘참여단’, ‘기자단’ 등이 설치되

어 있곤 하다. 예컨대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참여위원회’, ‘학생참여단’, ‘기자단’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참여위원회’, ‘기자단’ 등은 교육감 등 관료 등의 의사에 의해 설치된 조직 등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반면, 학생참여단은 학생인권조례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학생참여단이 특별나게 우월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설치 근거가 명확하고, 업무가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교육감이 누구이건, 교육청의 정책이 어떻건 간에 운영되어야 하며, 그 업무를 수행해야하는 것이다. 그리고 보통의 조례들은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업무를 지원할 부서를 명시한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그 업무를 옹호관에게 맡겼고, 옹호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주무부서가 맡도록 하고 있다.⁴ 관료들이 흔히들 대는 핑계가 “서울에 있는 조례가 몇 개인데 그것을 다 지키느냐”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실무를 직접 처리하지 않으면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모든 실무를 맡아 진행해봐야 “행정상 맞지 않다”는 말 한 마디에 일이 물거품이 되기 십상이다. 비단 학생들로 구성된 조직이기에 생기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아마도, 학생인권조례는 현재와 같은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를 규정하였겠지만, 관료들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조직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을 놓지 않는다. 하여 학생인권옹호관 조례가 대법원에 제소되고 시행을 거부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민주주의 발전 과정 가운데 ‘관료통제’가 핵심⁵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곤 한다.

다양한 기대들은 부담스럽기 마련이다.

누구나 많은 이들로부터 기대를 받으면 부담스럽기 마련이다. 시키지

4 서울특별시 조례 5247호 학생인권조례 제 39조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 8호 : 학생인권위원회 및 학생참여단의 업무지원 . 9호: 학생인권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의 집행

5 ‘직업으로서의 학문, 직업으로서의 정치’ - 막스 베버

않아도 알아서 할 터인데, 시키면 무엇도 하기 싫은 심리와 비슷할 수도 있다. 2012년, 학생참여단 1기가 처음으로 출범했을 때에 분명 많은 이들이 기대를 했을 것이다. 학내 인권 전도사가 되길 기대했던 이들도 있을 것이고, 교육청의 경우, 비서실과 주무부서, 담당자 등 각자의 기대가 있었을 것이다. 대부분들 “잘 됐으면 좋겠어” 같은 긍정적인 기대였으리라 믿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적당히’가 쉽지 않다.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 조례 개정 과정에서 학생참여단의 의견수렴을 거쳤다는 희대의 사기극을 벌였던 것과 같지는 않겠지만, 입맛에 맞지 않을 때는 ‘스펙만을 생각하는 이들의 집단’이라며 매도당할 때가 있기도 하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기에 일어난 일이었는지 확신하긴 어렵지만, 2012년 가을, 한 청소년인권 단체에서 ‘학생참여단 설치 200일 기념 토론회’를 개최하였던 적이 있었다. 학생참여단에서 개최를 하라, 말라할 입장이 아니지만, 학생참여단에서는 자신들의 설치를 맞았는데, 학생참여단과는 별다른 상의도 없이 모 단체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에, 몇 일 안에 참여 여부를 결정해달라는 요청에 다소의 놀라움과 불쾌함, 부끄러움이 혼재된 분위기가 역력했다. 추측컨대 당시 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이 학생인권조례 시행을 멈췄던 시기였던 점과, 학생참여단 내에서 200일 관련하여 별다른 준비가 없던 것을 알고서 그쪽에서 개최하고자 하였던 것이 아니었을까 싶다. 아마도 그 단체에서는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학생참여단이 그 당시 시국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던 것일지도 모르겠다. 어찌되었건 형식상 토론자로 학생참여단 부대표가 참석하여 참석자들과 좌담을 나누었지만, 분위기는 참여단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며 질책 받았던 불쌍한 기념일로 기억된다. 누군가의 평을 빌리자면 “학생참여단이 조직되지 않은, 학생인권 등의 담론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식 밖의 예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무시할 수 없는 스스로의 문제

1,2기 학생참여단에는 분명 ‘고스펙’의 학생들이 존재한다. 자사고, 외고 등을 비롯해 관에 설치된 대부분의 기구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존재한다. 아닌 이들도 있겠지만, 생활기록부에 한 줄 들어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참여하는 이들도 분명 존재한다. 왜곡된 입시로 인한 폐단일 수도 있을 것이고, 잘못된 허영일 수도 있다. 혹은 취미생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지도 모른다. 학생참여단의 모집이 일정 수의 추첨으로 이루어지다보니 학생인권에 깊은 관심이 있는 사람은 참여하지 못하고, 위와 같이 생활기록부 관리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한다. 반대로, 추첨제가 ‘고스펙’학생들만의 참여를 막는 장치가 되어주기도 한다. 현재는 입시정책의 변화로 외부활동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올 해 모집되는 3기 학생참여단에는 취지와는 무관한 이들이 지원하는 일이 줄어들까? 명함이 갖는 의미에 대한 고민 없이 명함 자체만을 바라보고 참여하는 이들은 정책과 상관없이 항상 있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학생참여단이 스스로 부끄럽지 않기 위해 자체적인 인권교육 등을 실시해야하는 이유이다. 서로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도저도 아닌 학생인권조례의 상황임에도 힘내서 무언가 해보자고 격려해야하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시행 2년을 가장 가까이서 겪다보니 조례에 남다른 애정이 생긴 것 같다. 학생인권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온 활동가들과 많은 관계자들 역시 마찬가지로의 마음일 것이다. 조례의 상황이 어렵다고 하여, 혹은 누군가의 행보가 더디다고 하여 답답해하거나 조금 해하지 말자. 학생인권이라는 씨앗이 뿌려진 것이고, 바람이 거세야 나무는 튼튼하게 자라는 법이다.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열망이었던 학생인권조례가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길 바란다. 나는 고교생활 2년 이상을 학생인권조례와 함께했다. 행운이 함께한다면 3기 학생참여단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해볼 마음이다. 아마 지금보다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을 것이고, 나 스스로가 가지는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겠지만, 시나브로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다보면 추구하던 바들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청소년의 정치참여도, 학생인권의 실현도, 최저임금 1만원도 말이다.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이기를 바란다.

- 학생인권조례와 학생참여단의 이야기를 함께할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공현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실천 없이 제도 없다

'청소년의 권리이자 운동으로서의 '정치'라는 녀석'

추상적인 말들끼리 합쳐서 만들어진 말이 대개 그러하듯, '청소년 정치'라는 말 역시 딱 들었을 때 그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가 어려운 말이다. 예컨대, 청소년이 하는 정치를 말하는 것인지, 청소년 정체성이 반영된 정치적 실천들을 말하는 것인지, 청소년의 제도권 정치 구조에의 진입을 말하는 것인지,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정치를 말하는 것인지, 적어도 서너 가지의 해석이 가능할 법하다. 만약 '청소년 정치'를 넓은 의미로 사

용한다면, 청소년들의 집단적인 실천과 활동 전반 — 곧 청소년운동 전체를 다루는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일단 '청소년 정치'를 좀 더 좁은 의미로 규정하고 시작하려고 한다. 바로 청소년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문제, 즉 의사결정 과정에 민주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표현하는 등의 제도적인 '정치'에 관련된 운동을 살펴보자는 것이다.

학생회 법제화 운동, 낮추자 운동, 기호0번 운동, 내나라 운동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 기본적인 인권의 영역과 겹치는 것들이 '청소년 정치'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문제임은 틀림없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제도적인 참여의 문제에 앞서 이런 자발적 영역에서의 자유들이 확보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들을 모두 훑어보기 시작하면 봐야할 것들이 지나치게 많아지기도 하고 초점이 흐려지기 때문에 '제도적인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에 관련된 청소년운동의 역사들만 우선 짚어보려고 한다. 크게 보서는 2001년 이래 학생회 법제화 및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운동(고운에서 직선제 학생회 운동 등은 다른 발제자님이 더 잘 이야기해주실 거라 생각하여 굳이 말하지 않는다.), 2002년에서 2004년까지 만18세선거권운동 낮추자 운동, 그리고 2008년과 2010년의 기호0번 청소년후보 운동, 2012년의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내나라 운동 등을 꼽을 수 있다.

학생회를 학생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기구이자 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기구로 법적 근거를 가지게 만들고 학교운영위원회에도 학생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은 2001년 <전국중고등학생연합>이 처음 캠페인으로 전개했으며, 이후에도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 <한국고등학교학생회연합>, <발전하는 학생회 가자> 등도 꾸준히 주장했던 사안이다. 이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등에서 학생회 법제화 등에 관한 법안을 여

렸 발의하게 하는 성과로 이어졌으나, 이러한 법안들은 모두 교총과 한나라당의 반대로 입법에까지 이르지 못했다.

2002년에서 2004년까지 이루어진 만18세선거권운동 '낮추자'는, 엄밀히 말하면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운동이 아니라 만18세선거권 하나에 초점을 맞춘 운동이다. 하지만 당시 '만18세선거권' 자체가 청소년의 정치 참여 문제와 동일시된 측면도 있고, 주장도 청소년의 참정권 차원에서 많이 논의가 되었으며, 또 청소년운동과 연결된 주체들에 의해 청소년운동의 맥락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청소년 정치적 권리 운동으로 봐야 한다. 특히 이 운동은 대중적 인지도나 이슈화라는 점에서는 가장 성공적이었고, 이후에도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문제를 선거권 연령 제한의 문제로 이해하게 하는 등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후에도 YMCA 등이 제기한 청소년 참정권 문제는 대부분 선거권 연령 제한 조정이라는 틀에서 17세나 18세나 하는 것이 오가는 수준이었고, 이는 '낮추자'의 영향을 보여준다.

이 운동 덕분에 열린우리당, 민주당 등은 만18세 선거권 연령 제한 조정을 당론으로 확정했으며, 그 후 2005년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타협에 의해 선거권 연령 만20세 제한에서 만19세 제한으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다. 선거권 연령 제한이 실제로 조정된 것은 하나의 성과라고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만19세 역시 통상의 의미에서 청소년-10대는 포함하지 않게 된 셈이기 때문에 청소년운동으로서 성과라기에는 애매한 면이 있다.

2008년과 2010년의 '기호0번 청소년후보 운동'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와 <교육공동체 나다> 등이 진행한 활동으로, 당시 새로 시행된 교육감 선거 때 청소년들이 직접 '교육감 후보'로 나선다는 컨셉의 문제제

기성 퍼포먼스 활동이다. 이는 교육감 선거 국면에서 왜 청소년은 참여할 수 없는지 문제의식을 환기시키는 짙막한 활동이었고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운동은 아니었다. 따라서 눈에 띄는 성과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 다만 '만18세 선거권' 수준 이상으로 더 이야기가 나오지 않던 청소년운동에서 2006년 이후 처음으로 다른 방식으로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문제를 제기한 운동으로 의미를 부여해볼 수 있을 것이다.

2012년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내나라' 운동은 <희망의 우리학교>,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등이 함께 연대체를 구성해서 한 운동이다. 2012년은 총선, 대선이 한꺼번에 있던 해이고 이때 1인시위와 토론회, 포럼 등으로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을 주장했다. 그 주장의 내용은 사실상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 제한의 조정 정도이다. '낮추자'에 비교하면 피선거권이 포함되었으나, 사람들에게 내용적으로 크게 다르게 받아들여 지지는 않았다. 뚜렷한 성과도 없이 사라져서 결과적으로는 2012년 선거 시즌용이었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는데, <아수나로>의 책임도 크다고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더 까고 싶지만 그냥 이 정도로 적어둔다.)

정치와 운동의 주체는 과연 누구이며, 지금 존재하는가

과거의 운동들을 돌아보았을 때, 나는 우선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위한 운동이 단 한 번도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학교 내 참여의 문제이든, 선거와 연관해서이든, 그러한 주장을 대중에게 홍보하고 다수가 참여하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낸 사례가 없다. 1인시위와 입법청원 또는 퍼포먼스 수준에 머물거나, 아니면 성공적으로 이슈화를 한 경우에도 선거철 내지는 짧은 단기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 원인은 ① 청소년운동의 역량 부족 ② 문제를 제도적, 입법적으

로 해결하려는 사고방식 ③ 관행적인 이슈파이팅에 의존하는 운동방법론 등이 있다. 이 모든 문제들은 이 글을 쓰는 나 역시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나마 이슈파이팅 면에서 성공적이었던 것은 '낮추자' 뿐인데, 나는 '낮추자'의 성과를 평가할 때 대한민국 민주화의 역사와 연동시킬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대한민국 건국 당시 선거권 연령 제한은 만21세였고, 이 연령은 학생, 청년이 주가 되었던 4.19 혁명을 거치면서 만20세로 조정된다. 그리고 2005년에야 만20세에서 만19세로 바뀐다. 이는 겉으로 보기에 별개의 사건 같지만, 87년 6월 시민혁명과 연계하여 봐야 한다는 생각이다. 즉 1987년 6월혁명에 의한 87년 체제 이후 민주당 정권이 뒤늦게 집권을 하고 국회 다수당을 이루면서 선거권 연령 제한 조정이라는 묵은 과제도 처리했다는 것이다. 나는 선거권 연령 제한의 조정이 한국 사회에서 주권자 시민, 유권자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형식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며 시민혁명이나 적어도 그에 버금가는 큰 운동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결국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합의에 의해 선거권 연령 제한이 만18세가 아닌 만19세가 된 것은, 비록 '낮추자'가 청소년 참정권의 논리를 펴긴 했지만, 여전히 선거권 연령 제한 조정의 논의는 청소년의 참정권 차원이 아니라 20대-청년의 문제 내지는 표심의 문제 정도로만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 사회는 아직 '청소년 정치'를 인정하는 사회가 아닌 것이다.

우리 운동 안에서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나아가보자. 과연 청소년 정치의 '주체'는 누구인가? 또 현재 존재하는가? 쉽게 말해서, 학생회가 법제화된다고 하면 과연 학교 안에서 학생회 집권을 하고 학내 정치를 해나갈 주체가 있는가? 현재 우리는 두 가지 의미에서 '주체'가 없다. 하나는 청소년 참정권을 위한 운동을 해나갈 주체가 없고, 두 번째로는 청소년 참정

권이 보장되었을 때 그 열린 공간에서 정치를 만들어갈 주체가 없다. 그리고 이 두 주체의 문제는 아마도 그리 다르지 않은 문제일 것이다. 이러한 주체 형성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지 않고 제도적 해결로 청소년 정치를 만들 수 있거나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생각은 텅없는 탁상공론이다.

'정당 없이는 대의제도 없다.' '(대의제) 정치가 잘 되려면 정당이 잘 돼야 한다.' 맞는 말이다. 그리고 청소년의 조직이 없이는 제도적 참여 역시 없다. 간단히 말해서 '대한민국청소년특별회의'라든가 '청소년참여위원회', '학생참여위원회' 등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들은 모두 청소년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기구들이다. 그러나 이 기구들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제대로 된 권한이 없다는 것이 물론 가장 큰 문제이다. 그러나 단지 권한이 없는 것만이 문제라면 적어도 저 위원회 안에서는 활발한 주장이 제기되고, 그것이 막히는 모습이 몇 번씩은 연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들 다수가 기구의 존재도 모르고, 기구의 구성원들 역시 어떤 식으로 다수 청소년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할지 몰라서 그저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현실이다. 청소년의 제도적 참여로서의 정치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면, 동시에 주체의 문제, 즉 청소년 안에 조직이 있고 '정당'이 있는가 역시 자문해봐야 할 것이다. 내가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주체의 부재는 실천의 부재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실천은 주체의 행동이며 그 이전에 주체를 만들어내기 위한 행동이기도 하다. 정치 영역에 진입하는 일,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일은 핑창히 저항이 클 수밖에 없는 일이며, 이것이 논의라도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커다란 압력을 가하는 수밖에 없다. 이것이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청소년 아닌 시민들 역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입길에 오르내리게 만들 정도의 사회적 운동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자신들의 정치를 이야기

하는 다양한 청소년 주체들의 형성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특히 현재 청소년 참정권이나 정치 의제는 한정된 사람들, 선거나 정치 등에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는 소위 '깨어있는'(뭐가 깨어있는 건진 몰라도) 청소년들이나 '관심'을 가지는 이슈라는 점도 직시해야 할 것이다. 학생회 임원이라거나 정당 당원 같은.

얼마 전에 아수나로에는, 어느 고등학생연합동아리로부터 '대통령 직속 청소년위원회'(청소년 정책 특별 기구)를 만드는 것에 지지를 보내달라는 이메일이 도착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이메일이었다. 이게 '청소년특별회의'의 재탕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나 있을까. 왜 사람들은 이렇게 제도적 해결에 의존하려고 들까. 심지어 '대통령 직속'이라서 대통령의 청소년을 향한 의지를 드러낸다는 부분에서는 그 순진무구함에 쓴웃음을 지었다.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 직속 청소년위원회를 만들자고 하는 것 말고 더 제대로 된 실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 정치를 향한 길을 만드는 운동이 필요하다. 그런 사람들 말고도 더 다양하고 소수자이고 정치 자체에서 배제되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정치 참여를 상상할 수 있게 하는 기획과 조직화가 필요하다.



귀모 / 노동당 청소년위원회 회원

'청소년 정치의 가능성'

정치라는 말은 언제나 범람한다. 신문지면의 앞부분에서 보도되는 것부터 인간 관계의 기술, 각종 사회 운동 행위를 아울러 지칭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정치는 곳곳에서 말해진다. 이러한 흐름들에 마주하여, 정치를 규정해야 하는 필요성에 맞닥뜨린 사람들은 흔히 정치를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달리 규정한다. 그 규정에서 정치란 대체로 넓은 의미에서 권위의 배분과 관련된 행위들을 총칭하며, 좁은 의미에서 의회-정당 정치에 관련

된 것들을 칭한다.

오늘날 적어도 정치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매우 찾기 어렵다. '정치라는 말'이 갖는 중요성은 일종의 반정치적이거나 탈정치적인 경향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안철수의 새 '정치'란 말을 보라! 그리고 흔히 정치의 중요성을 말할 때 일상 정치를 중요시하는 사람은 넓은 의미를, 정당 정치를 중요시하는 사람은 전자를 말한다. 그런데 정치의 두 정의 사이의 간극은 필연적으로 어떤 험거워짐을 연출한다. 즉 좁은 의미의 정치가 넓은 의미의 정치를 담아내지 못할 때 의미의 과잉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넓은 의미의 정치는 포괄하는 범위가 너무 넓기에 확실하고 합리적이라고 여겨지는 좁은 의미의 정치에게 자리를 자주 내주고는, 그 최종 귀결점을 좁은 의미의 정치로 설정 당한 채 압도 당하곤 한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정치를 논하는 것, 특히 청소년 정치와 같은 것을 논하는 것은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정치라는 말의 잘 다루어지지 못함, 특히 청소년 정치의 잘 다루어지지 못함에는 이러한 의미의 분할이 개입된다. 청소년 정치를 말할 때 청소년의 정치인 되기 혹은 투표권 제한 연령 낮추기가 대표적으로 다루어진다는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 흔히 말하기에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는 박탈되어있기 때문에, 청소년 정치를 필연적으로 불가능성에 놓여진 것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우선적이고 당면적인 과제는 그 박탈에 관한 것이 된다. 다른 국가의 투표권 제한 연령을 들면서 조금씩 낮추는 것, 그것이 현재 고등학생과 만 19세 사이에 이중으로 놓여있는 청소년의 탈정치적 보호막을 조금 벗겨줄 것이라고 믿는 것 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러한 믿음은 쉽게 실현되지 않는다. 먼저 투표권은 결코 정치적 성격의 만능 핵심이 아닐뿐더러,

그것은 시혜적으로 획득되는 것이 아니다. 투표권에서 배제된 자가 투표권을 얻어왔던 가파른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그리고 어떤 나눔은 항상 그것을 지지하는 세력을 기반으로 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그 나눔은 조건의 철폐 역시 그에 반하는 세력을 필요로 한다. 존재하는 청소년의 세력화 없는 정치적 권리 운동은 교육감이나 헌법 재판소 혹은 사법 기관 등에 기대는, 결과적으로 전문가 대 전문가의 정치가 될 수 밖에 없으며 권위에 기대기에 권위에 의하여 쉽게 흔들린다.

우리는 이와 유사한 현상을 학생인권조례에서 목격했다. 학생인권조례, 특히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곤 하는 서울시학생인권조례의 경우 그것을 누가 지지하게 할 것이며 현장에서 이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신통치 않았다. 통과 과정이 평탄했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어서 그런 것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는 말이 구차한 것은 아니지만, 전교조나 진보교육감 이외의 청소년 지지 세력을 계속해서 만들고 그 법을 만드는 행위의 목적과 정신을 이어나가게 하는데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것은 고스란히 조례의 무력화로 돌아왔다. 결과적으로 교육감과 교육감을 지지하는 주요 단체에 의존하게 되는 취약성을 보여주게 된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 정치를 말하기 위해서는 이와는 다른 정치를 말할 것이 요청된다. 그 공백을 명확히 응시할 정치 말이다. 이러한 지점에서 정치는 불화에 기초한다는 정의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즉 자격 없는 자가 자격을 요구할 때 정치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청소년세미나모임 세모는 교육자-피교육자에 대한 규정을 없애고 그 자격 없음을 기반으로 한다.

청소년 정치에 대한 상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청소년의 모습을 규정해보자.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청소년

년 기본법의 목적에서 사회에서의 청소년이라는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는지를 엿볼 수 있다.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다니?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청소년과 다소 모순되어 보이지 않은가? 여기서 “정당한”이라는 말에 좀 더 집중해보자. 무엇이 정당한 것인가? 각각에게 그에게 주어져야 마땅한 것을 주는 것이 정당하다는 말이 흔히 돌아오는 대답일 것이다. 그러나 “주어져야 마땅한 것” 역시 주어진다. 그리고 청소년에게 마땅한 것은 피교육자의 신분, 국가가 사회가 필요로 하는 향후적 존재,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예외적 상태다. 그것이 청소년에게 마땅한 ‘정상적 상태’로 간주된다. 청소년 정치는 그 마땅함에 대한 인정할 수 없음, 즉 불화로부터 출발한다.

청소년 정치라는 말을 굳이 꺼낼 수 밖에 없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청소년의 존재로부터의 정치적 조건에서 온다. 다시 말하면 청소년은 주권자가 아니라, 비주권자로서 주권을 부여하기 위한 시기다. 이 점은 사회가 인민의 평등을 인정하고 있지 않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인간은 주권자에 마땅한 존재로 “키워져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의무교육의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는 원칙이며, 인민은 결코 공적인 장에 무지의 모습으로 스스로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금기와 연관된 것이다. 얼마 전 청소년세미나모임 세모에서 흥미로운 대화를 나눴다. 현재의 교육제도에 대한 논의를 하던 중, 그렇다면 무슨 의무교육제도가 어떤 근거로 있어야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 적어도 이것은 기본이지 않을까라는 의미로 이것저것이 나왔다. 예를 들면 수학이라든지, 글쓰기라든지 말이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누군가가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해 어떤 지점을 통과해야

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것을 수행하지 않은 자의 공적인 발언은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런 차등이 가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예를 들어 공청회에 지적 수준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참가를 막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 사람들의 독해력 부족을 탓하고 본래 의미에서 벗어난 '난독증'을 들먹일 때, 현장 없이 전문가의 권위를 추종하고 위임을 철회하기를 극구 꺼릴 때, 능력이라는 이름으로 자격을 들먹일 때 그러한 나눔은 끊임없이 수면 위로 떠오른다.

청소년은, 그러니까 그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만 하는 자는 따라서 언제나 민주주의의 '예비 시민'이다. 즉 여기서 우리는 시민의 이미지를 재고해 볼 수 있다. 오늘날 우리가 떠올리는 시민은 시의 거주민이라는 일차적 의미가 아니라, 공무를 담임하고 있지 않음에도 공적인 일에 참여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한 여유를 가진 사람은 소수이며, 동시에 나쁜 시민의 이미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다. 그렇게 모두의 시민 되기는 필연적으로 실패한다. 그렇다면 일부의 '대변자', 즉 시민 되기에 성공한 일부가 정치를 대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가? 그러나 앞서 우리는 그것이 전문가 대 전문가의 정치가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인민은 정치적 주체로 설 수 없기 때문이다. 시민 되기의 환상은 합리성이라는 신념, 즉 합리적으로 모든 정보가 제공되고 설득하면 가능할 것이라는 환상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그리고 그 환상이 은폐하는 것은 삶에서 끊임없이 제기 가능한 불화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지 못한 채 모든 결정을 위임하며 스스로가 할 수 있는 한계로써 인터넷 댓글을 다는 시민 혹은 국민이라는 이름의 다수의 삶이다.

따라서 청소년 정치는 청소년을 가로지르는 나눔을 벗어나려는 것에서 온다. 그리고 이 청소년은 소수의 대변자가 아니라 바로 청소년 자체이다. 청소년의 감각적 유예 상태, 그러니까 청소년은 미성숙하기에 사회에 유의미한 발언을 하기 어렵다는 전제를 부수는 것이 나눔을 벗어나려는 기

초적 형태일 것이다. 이것은 결코 시혜적으로 목소리를 전달하자는 말일 수 없다. 그러한 시혜는 말하고 들리는 형식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치 노동당 안에서 청년이 말하지 않는데 노동당이 청년 정당을 말하는 것이 우습게 들리는 것처럼 말이다.

얼마 전에 녹색당의 "우리 아이들에게 핵 없는 세상을"이라는 구호를 아수나로가 문제 삼은 일이 있었다. 이로 인해 페이스북 등에서 수많은 말들이 오갔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대중적으로 효과가 있기에 그런 것뿐인데 물고 늘어진다고 말하기도 하며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을 쏟아냈다. 그러나 이것을 문제 삼는 행위 속에는 아이들을 현 주체로 상상할 수 없음을, 성인과 그에 부속된 비-성인 즉 아이로 구성된 세계의 모순을, 그러한 세계의 일반화를 거부하는 것이 포함된다. 기존 세계는 나눔을 유지하려고 한다. 그 나눔을 깊이 파이게 하는 것, 그것은 통치의 강화이며 정치의 반대이다. 따라서 우리는 나눔에 반하는 다른 움직임으로부터 또다시 청소년 정치를 발견한다.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 정치가 단순히 몇몇의 생활 양식의 변화를 통해 완결되는 것은 아니다. 일탈 행위는 정치의 불연속적인 단편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지난 겨울에 크게 유행한 '안녕들 하십니까'의 대자보 중 적잖은 수가 청소년이 다니는 학교에 붙었다. 이것은 분명 정치적 사건이었다. 학교에서 청소년이 공론을 형성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들리게 하는 것은 금기였고, 실질적으로든 암묵적으로든 제한되어 있었다. 즉 학교는 그러한 성격의 장소가 아니었다. 그러나 이 유행은 그 나눔을 일시적으로 없애버렸다. 청소년은 부끄럽지 않게 자신이 쓴 대자보를 페이스북에 올리고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성공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것은 분명 청소년 정치의 일면을 보여줬다. 그러나 해방의 힘은 회귀에 대한 저항에서 나온다. '비정상적 정상화'에 맞서서 끊임없이 불화와 불일

치를 일으키는 것에서 저항은 발생한다. 그러나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는 그 점에서 실패했다. 그 어느 학교 현장도 이로 인해 나눔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청소년의 말하기는 다시 중단되어버렸다.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정치적 의미 부여에 실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의 대자보에서 중요한 것은 말할 수 없게 된 사람의 말하기라는 측면이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이 없을 때 그러니까 청소년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고 그것을 다만 철도노동자에 대한 한마디 덧붙임으로 여길 때, 그 집단 내부든 외부든 그렇게 여겨질 때 그 지속성은 사라져버리고 만다. 마찬가지로의 모습이 교과서 선정에 대한 저항에서도 발생했다. 가르치는 교사-학교의 결정과 배우는 학생의 생각이 다를 때, 그 불일치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항구적 권리로 지속되게 하는 지점은 잊혀지고 말았다.

여기서 청소년 정치의 또 다른 요소 하나를 덧붙일 수 있다. 청소년 정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것이 해방적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을 정초하는 힘을 보유하고 재생산해야 한다. 합의에 의문을 제기하는 동시에 그것을 파기할 힘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의견 보장이라는 기술적인 문제를 뜻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조직화와 관철에 가까운 것이며, 평등과 연계된 작업들을 계속해서 발생시킬 부딪돌들이 필요함을 역설하는 것이다.

내가 속한 정당 청소년위원회로 돌아가보자. 정당 청소년위원회라는 것도 노동당이라는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진보 정당'에 청소년위원회라는 존재와 상황적 맥락은 무엇인가? 우선 정당이라는 금-청소년의 구역에 부문위원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일이다. 이 사회의 지배적 정치 양식, 그러니까 정당을 구성하고 선거를 하고 공무를 담임하여 권력을

배분하는 것에서부터 청소년이 배제되어 있다는 것은 명확하기 때문이다. 통합진보당 청소년 당원 사태가 이를 잘 보여준다. 정당은 흔히 선거로써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집단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정치적 상상력을 굳이 선거로 제한시키지 않으면서 동시에 청소년의 투표권 없음을 고려할 때, 정당은 일반적으로 꽤 큰 규모의 이념 집단으로 볼 수도 있다. 선거를 통한 권력 쟁취도 결국 주어진 것 안에서의 전략적 실현에 불과한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당은 가장 노골적으로 탈정치적 경향을 벗어날 수 있는 집단이기도 하다. 그것이 때론 행위의 방해 요소가 되긴 하지만, 가장 적극적인 말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

청소년 정치가 나아갈 곳은 어디인가? 내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청소년을 인민의 모습으로, 그 하나의 양태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성별이나 인종, 성적 지향, 장애 여부 등에 따라 불평등하지 않은 모습으로 세계가 구성되어야 하듯이 청소년인지 여부가 청소년에게 불평등하지 않은 모습으로 세계가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고정된 이미지일 수 없으며 따라서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학생참여단의 분투와 수고처럼 의견 수렴이라는 형식의 장신구를 넘어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들리게 하려는 수많은 노력이 청소년 정치고, 세모처럼 교육에서의 자격 없음의 상태를 가로지르려고 드는 노력이 또 청소년 정치이며, 아수나로처럼 인권을 유예 당한 자의 조건을 넘어서려는 것 역시 청소년 정치이다. 따라서 청소년 정치는 가능했고, 가능하며,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노동당 청소년위원회 회칙 중 목적에 '청소년의 정치적 주체화'가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존재해야 할 이유일 것이다.

청소년활동기상청 활기는 청소년운동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단체입니다.
청소년활동가들을 위한 공간 제공, 지원 사업, 강좌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활동기상청 활기

활기 동의 력 가장 사가쌍이는 소식지

청소년활동기상청 활기에서 소식지 <활력소>를 시작합니다!

<활력소>는 여러 청소년운동 단체들과 활동가들의 활동소식을 전하는 매체가 되고자 합니다.

youthhr 메일링으로 온 소식들, 그리고 그밖에 들려오는 소식들을 최대한 담으려고 하는데요, 혹시 놓치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가 특별히 소개했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면 활기 이메일(hwalgy@hanmail.net)로 보내주세요!

<활력소>에는 소식 말고도 청소년활동가인터뷰, 청소년활동가들이 함께 봤으면 하는 것에 대한 리뷰 등도 실립니다. 인터뷰 요청하면 환영해주시고, 리뷰도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언제든 보내주세요~

활력소는 2개월에 1번씩 나올 예정입니다!



문의: youthsemo@gmail.com

하루 010-8832-1524

를 소개합니다 :D

- ▲세미모는 청소년이 자본주의 경쟁사회 속에서 수동적인 삶을 강요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태어났습니다. 대다수의 청소년이 주입식, 암기식 입시제도 교육이외의 진정한 배움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유예당한 채 지금 현재를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 ▲세미모는 이와같은 억압적 사회구조와 체제를 청소년 스스로 인식하고 학교에서, 가정에서 가르치지 않는 학문을 자유롭게 배우고, 토론하고, 같이 공부하고자 합니다.
- ▲세미모는 기본적으로 한 가지 주제의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해당 주제의 책을 읽고 회원이 발제 및 토론으로 세미나가 이루어집니다.
- ▲세미모는 세미나 이외에도 교육/강좌/포럼/수다회/영상회 등을 준비하기도 합니다.